월/요/광/장

김배성

농촌인구 변화의 방향과 과제

1960년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농촌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연령별 및 성별 구조 등 인구 구조적인 측면의 도시와 농촌간 격차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역내 인구 과소화 문제와 더불어 도시지역의 인구 집중화 문제를 야기시켰고, 지역간 연령별, 성별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도시지역의 주택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경제 내외적인 매우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야기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슐츠(T. W. Shultz)와 베커(G. S. Becker)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의 지역간 이동의 요인으로 지역간 생산성 및 실업률 격차, 그리고 지역간 이동거리의 차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온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상의 지속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아직 뚜렷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실마리가 없어 보인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올해 약 4,887만 명에서 2018년 4,934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인구는 2010년 약 800만 명에서 2015년 724만 명, 2020년에는 650만 명 수준까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0% 수준에서 2015년 15% 수준, 2020년에는 12~1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농촌인구 변화의 방향이 2018년까지는 다르지만, 이후 장기에는 같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14세 이하 유년인구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해서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 같이 증가하지만 향후 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0~15%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농촌지역의 유년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이 도시지역에 비해 보다 가속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합(UN)은 14세 이하 유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고령화 지수가 7~14%인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20%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인 경우를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우리 농촌은 1980년 후반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00년에 고령사회에, 올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인구의 연령대별 남녀 성비를 보면, 현재 14세 이하 유년층과 15~64세 중장년층에서는 남자인구의 비중에 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여성인구의 비중이 보다 높다. 필자의 추계에 의하면 향후 2020년까지 남자인구 비중은 보다 낮아지고, 여자인구 비중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농촌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과 이들이 출산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아동인구에 대해 필자가 전망해본 결과, 농촌인구 중 외국인(아동인구 포함) 비중에 2005년 1%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2020년 15%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세 미만의 농촌인구중 외국인의 아동인구 비중이 2005년 2~5% 수준에서 2020년 30~50% 수준까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농촌인구의 변화추세와 전망을 종합해보면, 농촌인구와 그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농촌인구의 가속적인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여성화, 공간적인 측면에서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초고령 지역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 및 그 아동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농촌지역에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과 그 아동인구의 빠른 성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문제, 농촌지역에 결혼 의향은 있으나 결혼하지 못한 미혼남성 문제, 농업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사회적인 갈등문제, 이들 아동들에 대한 교육문제 해결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인구문제는 경제 내외적인 많은 요인들이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그 해결방안도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시행의 효과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이란 생각할 수 없다. 농촌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숙박난으로 성공 개최 비상 걸린 'F1'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부 업체는 해외 VIP 고객들의 모집을 이미 마치고 대규모 객실 확보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을 정도다.

대회 기간 전남을 방문할 내외국인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 호텔 객실은 2천900여실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VIP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특급 호텔은 1~2곳밖에 안된다. 심각한 숙박난은 이미 예견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가지 숙박 요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상시 요금의 2배는 기본이고 일부 업소에서는 4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은 전남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숙박난을 틈타 터무니 없는 요금을 받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F1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난 해소가 선결 과제다. 전남도는 F1경주장 인근 지역 호텔급 모텔 중에서 숙박시설이 우수한 곳을 'F1 인(inn)'으로 지정하고 홈스테이나 'F1 캠핑촌'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회가 열릴때마다 이같은 임시 방편으로 심각한 숙박난을 해결할 수 없다.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세제나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F1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F1 대회는 전남만의 행사가 아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나 중앙 정치권도 F1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숙박난 해소와 대회 붐 조성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교육의원 선거 '직선제'가 순리다

교육의원 선거 방식을 다루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28~29일 전제회의를 열고 6.2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 하루 전인 1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쟁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과 교육의원선거를 직선에서 비례대표 방식으로 변경하느냐의 문제다. 여기에서 후보자 자격 완화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지만 교육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없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의원 후보를 정당이 추천해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데 반해 민주당은 직선으로 설계된 현행 법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직선제로 하면 경기도의 경우 인구 227만명 당 1명의 교육의원을 뽑게 되고 재보궐 선거라도 하게 되면 1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된다"면서 현실론에 입각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원칙'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다수가 직선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변경만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교육의원의 비례대표제는 정당추천제로서 '나눠 먹기식' 분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가 교육이념 마저 훼손한다면 우리 교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교육의원 입지자들이 개정안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치권에 줄을 대는 것도 그 폐해를 입증하는 일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최정희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강기갑 의원 사건, PD수첩 사건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이른바 '용기 있는 판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 등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세하면서 사안이 엉뚱하게 사법개혁논의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발족시켜 사법개혁에 나섰지만, 여권은 '법원 길들이기', 야권은 '검찰 길들이기'라는 서로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가 자신의 성향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담당 판사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판사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판사의 집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개개의 판결에 대하여 담당 판사에게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면 어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여권은 법관의 당연한 활동인 전문법률분야 연구를 이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특정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특정 판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 성향이 있다는 등으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 판사들의 성향이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며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마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러한 논란의 소용돌이에 끼어들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법조인은 이러한 일방적인 성명 발표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법관의 독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제도는 원래 다양성을 본질로 한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판단의 주체로 하되, 심급제를 통하여 이러한 다양성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개개의 법관은 사법의 다양성에 충실하되, 독선과 독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꾸준히 균형감각을 단련함으로써 보편적인 국민의 법 감정 등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분쟁과 갈등의 해소가 사법시스템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재판에 대해 이념을 덧씌우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사법부에게 덮어씌우지 말고,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공천제도 등 스스로의 정치개혁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판결'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전완준

3共(共有·共感·共同對處)시대

'손발이 맞다'라는 말이 있다. 함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따위가 서로 맞다는 뜻일 것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엔 공존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시대 공직자 및 시민들에게 '공유, 공감, 공동대처 (共有·共感·共同對處)'라는 3공 시대를 열어 가자고 제안한다.

필자가 3공 시대를 열자고 주장한 배경엔 그만큼 공직사회에서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 공감, 공동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화, 조직화, 시스템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리스크와 비능률을 예방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시스템을 연구하던 차에 3공 시대를 대안으로 떠올렸던 것이다.

즉,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직원간 소통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스타일 북' 같은 업무편람 기능을 도입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최단시간에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필자가 주장한 3공은 공직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공존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처럼 각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대엔 공직자들의 자세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발전을 생각하며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문턱이 달아지게 쫓아다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3공의 원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과정이다.

공직사회의 특징은 상하간 보고체계는 원만히 이뤄진다. 그러나 부서간 수평적 협력관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자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과제가 많다.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하거나 진척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지난해 실과단소를 업무성격에 따라 4개 팀으로 재편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특히 중요한 현안사업을 결정할 땐 팀원끼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케 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 할 때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도입한 팀제 덕분에 3공이 빛을 발하고 있다.

공직자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는 데서 얻는 보람은 결국 공무원 사회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한다. '줄탁동시(口+卒 啄同時)'의 교훈이 공직사회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조직의 원칙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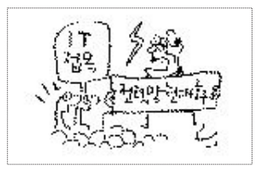
〈화순군수〉

無等鼓

스마트 그리드

지구온난화 속에서도 동장군이 유례없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폭설과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사용량이 연거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에너지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연초부터 에너지 절약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과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 그 것이다. 에너지 정보의 교환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얹음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발전-송전·배전-판매'의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단방향 전력망에 이동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사용 현황을 소비자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기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세탁기나 청소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선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 등 가정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어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소비로 낭비되는 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똘똘한 전력망'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7조5천억을 들여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요금이 달라지는 특성과 분산형 전력 공급, 판매가 손쉬워지는 특성 때문에 일각에선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이 요금인상과 전력산업 민영화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쌍방향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인만큼 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일성 싶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

하우스 난방용 기름 도난 잦아… 경찰 순찰 강화를

겨울철에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시설채소 재배에 꼭 필요한 하우스 난방용 보일러의 기름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통 하우스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돼 있고 야간에는 비워두는 곳이 많다. 자물쇠를 채워봤자 하우스 자체가 비닐이니 하나마나다.

또한, 기름탱크가 하우스 밖에 설치돼 있어 하우스를 지키는 관리인이 있다 해도 절도범들은 모두 잠이 든 시간대를 이용하고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버저가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 작동스위치를 차단하고 훔치는 교활함도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 시설재배 농가의 하우스 가온용 보일러 기름 도난을 막기 위해서는 보일러 보관창고를 견고하게 하고 이웃 농가와 순번을 정해 심야시간대에 순찰하는 것도 도난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 경찰에서도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줬으면 한다.

▲김일락·보성군 문덕면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